

전주매일

금연상담전화 | 1833-9030
전라북도 익산시 무왕로 895신원동 344-20 한광대학교병원 5층 1호
TEL: (063) 859-2400 ~ 2410 FAX: (063) 859-2414

비수술적 척추관절 투과치료 전문
세인 신경외과 의원
원장 박경문 ☎ (063)220-6600
전주시 완산구 효자 천변 2길 6번지

2016년 11월 15일 화요일 (음 10월 16일) 제1684호

www.jjmaeil.com

대표전화(063)288-9700

전주 남원 곡성 구례 순천 광양 여수 등 7곳

전라선 통과 지자체, 증편요구 한뜻

수서발 고속철도 경부선 최다 증편 등 정부 철도정책 배제에 따라 내일 세종청사 앞에서 전라선권 KTX 협의회 출범식 갖기로 KTX 증편·수서발 고속철도 전라선 운행 등 공동건의문 발표

김승수 전주지사를 비롯한 전라선 권역 7개 지자체 시장·군수들이 152만 지역민들의 염원을 모아 전라선 권역의 공동번영과 국토균형발전을 위한 공동 대응에 나선다.
14일 전주시에 따르면 전주시와 남원시, 곡성군, 구례군, 순천시, 광양시, 여수시 등 7개 지자체 시장·군수들은 16일 오전 10시 세종특별자치시 정부세종청사 앞(종합민원동 광장)에서 '전라선권 KTX협의회 출범식'을 갖는다.
이날 출범식에서 '전라선권 KTX협의회(이하 협의회)'는 △전라선 KTX 증편, △수서발 고속철도(SRT) 전라선

운행, △전라선(익산~여수) 고속철도 사업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 등을 요구하는 공동건의문을 발표할 예정이다.
7개 지자체 시장·군수들은 또, 이날 발표한 공동 건의문을 김승수 시장이 강호인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전달하는 등 전라선 권역의 공동번영을 위한 정부의 적극적인 관심을 요청할 계획이다.
전라선은 연간 1000만 관광객이 찾는 전주한옥마을을 비롯해, 지난 2012년 여수세계박람회와 2013년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 등의 성공 개최 이후 철도

이용객들이 늘고 있다.
실제, 지난해 전주한옥마을을 찾은 관광객이 965만명, 순천만국제정원을 찾은 관광객이 540만 명, 여수해상케이블카 등 여수를 찾은 관광객이 1300만 명으로, 협의회는 이를 근거로 전라선 이용 잠재고객을 연간 2800만 명 이상으로 예측하고 있다.
하지만 이런 상황에도 정부는 각종 철도정책에 전라선을 소외시키고 있다.
일례로, 최근 발표된 수서발 고속철도(SRT) 계획에는 전라선 구간이 단 한편도 배정되지 않았다.



14일 전북도청 종합상황실에서 송하진 도지사를 비롯해 실국장, 경제출연기관장, 정책지원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시국관련 특별대책회의를 갖고 송하진 도지사가 현 시국은 '내외우환'이 복합된 비상시국이라고 강조하며 '도민께 드리는 말씀'을 발표하고 있다.

도내 주요 기관장들도 "박근혜 퇴진"

송 지사 "대통령직에 대한 준엄한 사약" 김 교육감 "헌법·법률 위배... 탄핵해야"

도내 주요 기관장들이 박근혜 퇴진을 요구하고 나섰다. <관련기사 2면>
송하진 전북도지사는 14일 시국관련 긴급대책회의를 통해 발표한 '도민께 드리는 말씀'을 통해 "국민의 요구는 대통령직에 대한 준엄한 사약임을 알아야 한다"며 박 대통령의 결단을 요구했다.
송 지사는 "지금 우리 국민은 억제된, 순화된 분노로 성숙한 시민의식을 보여주고 있다"며 "성숙한 시민항쟁의 대열에 서 있는 도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존경의 마음을 표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제 박근혜 대통령은 지금 요원의 불길처럼 커지고 있는 국민의 요구가 대통령직에 대한 준엄한 사약임을 알아야 한다"면서 "하루빨리 나라가 제대로 된 법치질서를 바로잡아 주권재민의 정신에 따라 민주공화국의 국민으로서 안정되고 행복한 일상생활을 할 수 있도록 결단을 해야 한다"고 박 대통령의 퇴진을 요구했다.
송 지사는 "전북도는 오늘의 혼란과 위기의 국면에서 결코 흔들림 없는 냉철한 자세로 정국 발전을 위해 적극적인 대응을 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김승환 전북도교육감은 "대통령 탄핵"의 불가피성을 밝혔다.
김 교육감은 확대간부회의를 통해

"국민들로부터 권력행사를 위임받은 대통령이 헌법과 법률을 위해하여 신뢰, 즉 민주적 정당성이 무너지면 견제장치가 작동해야 된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헌법 65조가 규정하고 있는 탄핵 소추 의결이다"고 말했다.
김 교육감은 특히 '최순실 국정농단'이 본격적으로 불거지기 시작할 때 '대통령도 수사할 수 있다'라는 논란이 일었던 데 대해서는 "참 황당한 일"이라고 지적했다.
김 교육감은 "우리나라 헌법은 1948년에 다시 만들어졌다. 그때 67조에 해괴한 조항이 하나 들어왔는데,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때 이외에는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는, 이른바 대통령의 형사상 특권이다"고 말했다.
김 교육감은 "이는 대통령제를 취하고 있는 어떤 나라에서도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그야말로 '이승만 조항'이라고 할 수 있다"면서 "이 때 들어온 대통령의 형사상 특권 조항이 글자만 조금 바뀌어 지금 헌법 84조로 이어진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 조항은 태생부터 문제가 많았고, 이 특권조항은 우리 헌법 11조항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는 일반적 평등의 원칙에 균열을 내는 조항"이라며 "이 조항을 해석할

때는 엄격하게, 제한적으로 해석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시 말해 대통령 재직 중 형사상 소추, 즉 재판에 회부하지 말라는 것일 뿐 수사는 해야 된다는 것이다. /고민형 기자
한일, 군사정보협정 가서명
한일 양국 정부가 14일 일본 도쿄에서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체결을 위한 가서명을 했다. 이날 가서명은 지난달 27일 GSOMIA 논의를 재개한다고 공식 발표한 뒤 약 18일 만에 이뤄지는 것이다.
이를 두고 박근혜 대통령의 '비선실세' 최순실 씨의 국정농단 사태로 전 국민의 분노가 비등한 가운데 GSOMIA를 속전속결로 마무리하려 한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양국이 지난달 27일 GSOMIA 협정 체결을 위한 논의를 재개한다고 발표한지 18일 만에 이뤄진 가서명이다. 지난 1일 1차 실무협약, 9일 2차 실무협약을 한 뒤 이날 가서명에 이르렀다.
GSOMIA는 특정 국가들끼리 군사 기밀을 공유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맺는 협정이다. /뉴시스

최순실 특검법 국정조사, 17일 본회의 통과 세월호 참사 당일 7시간도 조사 박 대통령도 특검의 수사 대상

여야 3당은 14일 박근혜 대통령의 '비선 최순실'의 국정농단 사건에 대한 특별검사 임명과 국정 조사를 동시에 도입하기로 합의했다.
새누리당 김도읍, 더불어민주당 박완주, 국민의당 김관영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갖고 '최순실 특검법'과 '국정조사'를 오는 17일 본회의에서 통과시키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여야3당이 이날 합의한 특검법은 그간 야권이 요구한대로 민주당과 국민의당이 각각 추천하는 2명의 특별검사 후보자 중 1명을 박 대통령이 임명하는 방식으로 했다. 현행 상설특검법이 아닌 특별법 형식의 특검법인 셈이다.
'최순실 특검'은 4명의 특별검사를 임명할 수 있고 파견검사는 20명, 수사관은 40명으로 할 수 있도록 했다. 검사보 1명이 파견검사 5명과 특별수사관 10여 명을 지휘하는 형식이다.
수사기간은 특검 준비기간 20일을 포함해 본조사 70일, 1회에 한해 30일간 연장 등 최장 120일간 특검을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뉴시스

특히 특검 수사대상에 박 대통령의 세월호 참사 당일 7시간 미스터리 행적과 대통령 해외순방 시 성형외과 의사가 동행했다는 의혹 등에 대해서도 포괄적으로 조사할 수 있도록 했다. 박 대통령 역시 특검의 수사 대상이라는 얘기다.
또 우병우 전 민정수석의 재임 당시 주요 정치사건에 대해 영향력을 행사하는 등 전횡을 휘둘렀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포괄적인 조사 대상에 포함시키기로 했다.
무엇보다 이번 특검법에서는 '수사 과정을 언론에 브리핑할 수 있도록 한다'는 규정을 신설, 수사내용 공표 문제와 국민의 알 권리가 충돌하는 논란 자체를 제거했다.
한편 여야3당은 특검과 별도로 '최순실 국정조사'도 합의했다. 최순실 국조는 위원회의 활동 기간을 60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30일간 연장할 수 있도록 해 최장 90일간을 조사기간으로 설정했다.
국정조사 위원회는 18인으로 구성되며 여야 동수로 구성하도록 했고, 조사 대상은 특검법에서 지정한 범위와 동일하게 작용하기로 합의했다. /뉴시스

- ▶ 매일 INDEX
- 2면 도내 외국인주민 4만4천명
- 4면 전주시, 미래유산 프로젝트 본격 시동
- 5면 17일 수능... 유의사항은?
- 6면 은행·카드사, 고금리 장사 '눈살'

전주매일의 창간 8주년을 축하합니다 www.ischeese.co.kr

반세기기를 이어온 치즈사랑, 한국치즈의 대명사

임실치즈

임실치즈농협의 역사가 한국치즈의 역사입니다.

임실치즈농협
SINCE 1967
TEL: 063)640-6464

임실치즈